

정치인 自淨운동 시급하다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정치의 무기는 말이다. 내일의 원대한 꿈을 말하는 정치인의 신념에 찬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열광하고 감동한다. 말은 정치인이 타고 난 천부의 소질과 같아서 아무나 흉내 내기도 어렵다. 정치인 또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다. 그 일은 정치인이 후천적으로 배워서 익힐 수 있는 능력이다. 멀리 앞날을 내다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치가 살 건가를 정하는 천리안을 갖는 능력은 그러나 정치의 현장에서는 한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아야 하는 선택이다.

대통령의 속된말 사용 적절한지 짚어봐야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놓쳤기 때문이다. 말도, 시기도 놓쳐버려 정치가 동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국정이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해괴하고 모두에게 공감을 줘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속된 말도 거침없이 쓰게 된다. 청와대 문건이라는 게 터졌을 때 박 대통령은 단호하게 '짜라시' 문서라며 국정농단이라고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시중에 굴러다니는 허접스레기 정보를 마구 뿌린다는 뜻의 '짜라시'라는 일본말은 시중에서도 흔히 쓰지 않는 증권가의 일본말이 아닌가? 대통령이 그런 품위 없는 말을 썼을 정도로 감정이 격했다는 걸 이해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검찰이 그 문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겠는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박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는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나머지 단두대에 올려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의 말에서 역사적인 고사를 인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규제개혁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두대라는 낱말이 과연 적절했는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치가 신의와 절제를 잃은 막말이 활개치고 혼란의 구렁에 빠진 데는 정치인의 절제를 잃은 험구나 무책임한 말 뒤집기가 큰 원인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소를 참배한 게 못 마땅하다고 히틀러 묘소 참배를 빗대는 어느 야당의원의 말은 험구라고 치부하기에도 모자랄 망언이었다. 그 문 대표가 총리 인준안을 놓고 여론조사로 대신하자고 말한 데 이르러서는 대의제도를 깔아뭉개는 무식의 극치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조용중

·본회 원로회우
·전 연합통신 사장

조폭수준 막말

대농친 정책-人事

더이상 없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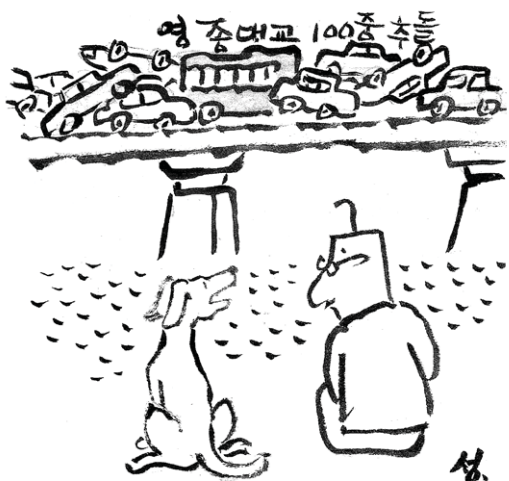
朴대통령

임기초 각오로

큰정치판 새로 짤때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회우)



한마디로 개판이군요

정치인의 말, 특히 야당의원의 절제 잃은 말은 예를 들 수 없이 많다. 어느 야당 국회의원이 의안에 대한 반대표시로 몰래 의사당에 갖고 들어 가 숨겨두었던 인분을 국무위원석을 향해 뿌린 일은 극적인 에피소드였다. 그와는 다르지만 흥분한 어느 야당의원이 예산안 반대연설을 하던 중 배를 가르겠다며 옷통을 벗고 자해 소동을 벌여 의무실에 실려갔던 일도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따지자면 시정잡배 같은 행패는 그 뒤 최루탄을 의석에서 터뜨리는 데까지 발전한 게 의정사에 기록되고 있다.

근엄하고 말의 전당이라야 할 의사당이 이런 조폭에 버금가는 수준이 된 것은 문명국답지 않은 정치의 타락 때문이다. 점잖고 바른 말을 배우고 익히지 못한 이 사회가 겪게 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건 모두 무책임한 핑계일 뿐이다.

정치인이 정치를 스스로 깔보는, 누워서 침뱉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자정노력이 없는 게 더 큰 원인이다. 사회 각 분야를 통틀어 정치인에 대한 자정만큼 더디거나 불성실한 분야는 없다. 그들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하고 많은 언동을 망라하는 자정운동이 불꽃처럼 일어나야 할 시점이다.

적기에 의표를 찌르는 정책과 인사 이뤄져야

정치는 또한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살아 숨 쉬는 현상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 또는 필요한 인사라도 제 때를 놓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흔한 말이지만 민심은 조석변이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다. 적기를 찾아 의표를 찌르는 정책과 인사는 정치가 표방해야 할 또 다른 무기이다. 그 정책이 제 때에 시행됐더라면 모두를 감동시키고 혜택이 되었을 것도 하루가 지나는 바람에 헌신짝처럼 무용지물이 돼서 폐기되는 예가 얼마나 많은가.

청와대 비서진 등 인사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졌을 때 박 대통령은 알은체도 않고 버틸대로 버티다가 때를 잃어버린 것은 모두가 본 대로이다. 그것은 박 대통령이 드물게 보는 신념의 정치인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치인에게 신념은 물론 소중한 가치이다. 신념은 때로 융통성 없는 고집과도 상통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꿈을

잃고 삭막한 꼴로 타락하는 것을 놔두고 보기에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촉박하다. 선거가 없는 올해는 박 대통령에게는 임기 말이라는 각오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진검승부의 해이다. 그 승부의 싸움은 동력을 주는 큰 정치, 여의도의 낡은 정치판과 작별하고 큰 정치, 신념의 정치판을 새로이 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여의도의 귀중한 경험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은 지나온 날의 영광의 기억을 지워야 한다. 천막당사 때의 기억, 추종세력을 모두 잃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때에 겪었던 비주류의 눈물겨운 추억, 끝내는 대권을 손에 잡은 환희의 기억들을 모두 깨끗이 털어버리고 새 임기가 오늘부터라는 각오로 큰 틀의 정치를 시작했으면 싶다. 임기 3년차가 되더니 대통령이 달라졌다고 수군대는 소리가 여의도에서, 관가에서 들리게 해야 할 때이다

조카 응석 받아주는 대통령 보고싶다

박 대통령은 사랑하는 동생들과 어울리는 걸 피하고 스스로를 외로운 울타리에 가두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이 겪었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럴 정도로 고고한 생활을 고집하는 대통령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동생들과 가끔 만나서 수다도 떨고 조카들의 응석도 받아주는 속이 넓은 대통령을 봤으면 좋겠다. 가끔 야당 지도자나 각료들과 어울려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잡담도 하는 부드러운 대통령의 얼굴을 보도사진에서 봤으면 하는 욕심도 간절하다. 긴장을 푼 대통령의 표정, 그의 맨 얼굴은 어떨까를 보고 싶다. 대통령의 말을 받아쓰기에 바쁜 각료들은 지난 2년동안 싫도록 봐 왔으니까. [K]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저질 정치인 퇴출제도 만들자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 중 61명이 전과자다. 민주통합당(당시)은 당선자 127명 중 44명, 34.6%가 전과자이고, 지금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13명 당선자 중 8명, 61.5%가 과거 범죄자다. 새누리당은 당선자 152명 중 7명[4.7%]이 전과자이다.

모르긴 해도 제대로 된 나라 중 이렇게 많은 전과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교사, 회사원, 기타 정상적인 직종 중에서도 이렇게 전과자 비율이 높은 집단이 없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이런 집단에게 우리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맡긴 현실에 소름끼칠 위험을 느껴야한다.

당 공천부터 바로잡아야

현재 우리나라 저질정치의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발견된다. 첫째, 전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반공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위반한 반국가 반체제 반공권력 事犯이란 점이다. 특히 지금은 해산된 통진당에 이런 전과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법질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대해 공천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이라는 단체의 활동자금을 마련한다고 다른 소속원과 함께 재벌회장 집에 침입했다가 잡혀 또 다른 사건인 '남민전 사건'과 병합돼 실형을 받은 사람도 공천해 당선시켰다. 작년 재보선 때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서울경찰청장이 외압전화를 했다고 고발했던(외압 불인정으로 대법원 무죄판결) 전 경찰 간부도 전략 공천하지 않았는가. 이런 당이기에 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건국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룬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히틀러의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느냐. 천황 묘소에 가서 절할 수 있겠느냐"같은 대한민국의 존재에 저주를 퍼붓는 폭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과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통진당은 강령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를 적시(揭示)해 반미사회주의국가 수립을 목적함을 명백히 한 정당이었다. 결국 이런 당에서 국회의 장석에 최루탄을 던진 의원도 나오고, '혁명조직[RO]'이란 내란모의 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까지

특별기고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학

현 국회의원 61명 반국가사범등 전과자 국가정체성 흔들어

감시기관 만들어 통진당 해산처럼 法으로 규제 마땅

음모한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다.

이런 정치가들이 횡행하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자유 등은 항상 붕괴위험을 맞게 될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혐오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로 주장하고, 이 사회의 성공한 부자, 기업들을 기득권으로 몰고, 한·미 군사동맹, 제주해군기지, 국가보안법 등 안보의 초석을 극력 저지하려 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저질정치가들을 청소할 방법은 이들이 발붙일 토양을 없애는 것뿐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 부류들은 선거의 과정을 통해 자연히 도태되지만 한국의 유권자나 정치의 현실은 아직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1의 압도적 찬성으로

오늘의 니대르

이 홍 우(본보 편집위원)



〈채널A TV 방영〉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는데 이는 민주화 시대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국가기구가 반국가적 정당과 그 무리들을 퇴출시킨 통쾌한 거사(擧事)다. 향후 이렇게 엄격하고 예외 없는 법의 집행이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반(反)대한민국의 저질 정치인들도 법에 길들여지게 될 것이다.

자기들끼리 담합, 특권 계급으로

둘째,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반의 자질이 말할 수 없이 퇴락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에게서 국민 대표의 사명감을 찾기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다. 특정당의 간판만 달고 영남·호남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부정부패 관련자라도 당선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서는 국회의

원들에게 공천 받는 일이 생사(生死)를 걸 중대사지 국민이나 국가의 이익 따위는 돌볼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정치는 사실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공천 주는 자는 왕(王)이고 공천 받는 자는 지역구의 영주(領主)다. 국민이 안중에 없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담합해 국회를 '귀족의 성(城)'으로 만들었다. 스스로 세비·수당·특권을 정하고, 회기 중 수시로 의석을 비우고, 예·결산 심사나 국정감사를 제멋대로 떼우고, 인척과 지인을 보좌관으로 쓰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세금도 안 내고 수익 원씩 챙겼다. 이렇게 보통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직무유기·포탈·배임이 허용되는 특권계급으로서 오늘날까지 안존해온 것이다.

오늘날 국회가 왜 있는지 관념이 없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이 한 일이란 국정업무를 정략홍정의 불모로 잡아 국회퇴장을 일삼고,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장관·기업인·공직후보자들을 호령한 일밖에 기억나는 일이 없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반 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대의제를 실종시키고 국회의 존재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런 여야정치인들이 지금 합작해 추진하려는 일이 대통령은 외교·국방권만 가지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행정수반이 되어 내치(內治)를 관장한다는 의원집정제 개헌이다. 대통령이 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도 좀 나누어 먹자는 의도일 것이다. 지금처럼 타락한 국회의원들이 정부 집행의 권력까지 나누어 요리한다고 생각해 볼 때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세비 깎기 특권 내려놓기 같은 자정(自淨)약속을 늘어놓았지만 이제까지 실현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타율적으로 제어되어야 하며 그 권력은 유권자인 국민이 가짐이 당연하다. 향후 국회의원의 자격·지위·대우와 범법·태만의 감시·징벌을 법률로 정하고,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그 운영을 맡게 해야한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의 권력이 지대한 상황에서 이 일의 관철을 위해서는 언론·지식인·시민단체 등이 국민투표 청원운동을 선도하는 등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

'100자 발언제'

'나라 바로 세우기'에 동참을

독립 의지 불태웠던 3월이 돌아왔다.

1919년 3·1운동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국민이 피 흘린 항일항쟁이었다.

지금 번영의 길로 들어선 대한민국은 국론분열이 너무 혼탁 극심해 우리는 2015년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를 온 국민에게 고하면서 自淨 운동에 나섰

다. 이 운동에 모두가 동참할 때 응집력이 커지면서 승화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

증세없는 무상복지는 환상

"증세 없는 복지로 국민을 속였다"는 여당 대표의 뒤늦은 고백. 복지 기금은 국민 세금인데 여기 저기 공짜로 퍼주는 난맥상. 무책임한 정치놀음에

국가 재정만 손실되나니 공짜 복지 환상에서 깨어나라.

조변석개는 국민 우롱

정부여! 신뢰를 잃으면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정책을 내놓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치자 백지화 또는 수정, 개편해보겠다는 조변석개 현상이 거듭되니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나.

유한준(본보 편집위원)

70년전 우리모습 보도에 시큰

지난 2월 22일 새벽 조간신문을 보며 코끝이 시

改憲 정치인에만 맡기면 위험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새로 선임된 야당의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 야당대표 대정부질문의 반을 헌법개정문제를 언급하고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 시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병행하여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야당 당대표까지 헌법개정논의에 동의하고 있어 야당발 헌법개정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도 친이계에서 헌법개정을 주장해 왔고 여당일각에서 헌법개정 논의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2015년 후반기에는 국회개헌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올 하반기 특위구성등 본격 논의 될 듯

국회에서는 헌법개정이 10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헌법개정팀까지 만들어 연구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헌법개정을 위한 의원모임을 만들어 헌법개정을 논의해 왔으며 국회의장에게 개헌연구특위를 만들 것을 주장해 왔다. 2008년 가을에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1년 만에 연구결과서를 보고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도 미래헌법연구회를 구성하여 나름대로의 연구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국회재적과반수의 의원이 연구회를 만들어 연구를 해 왔고 2014년에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로 개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5월말에는 새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문제의 블랙홀이 된다고 하여 경제건설·복지향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기에 여당에서 논의를 꺼려 아직까지 정식으로 거론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금년 후반기에 가면 개헌논의가 국회에서 접화될 것 같다.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개헌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를 밀어붙일 것이므로 헌법개정특위는 성립할 것 같다. 국회의원들로서는 사활의 문제인 선거구구획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정치개혁위원회는 구성될 것이며 선거제도문제와 관련하여 개헌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헌법개정안에 합의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야당의원들과 여당의원들의 다수는 헌법개정의 내용을 정부형태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은 지금의 대통령제는 대통령독재제로 운영되며 승자독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책임총리제를 두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되 내치를 전담하게 하고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게 하는 소위 분권형대통령제를 원하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완전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는 의원과 대통령 4년중임제로 하자는 의원도 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절충인 이원정부제 내지는 분권형대통령제를 원하고 있기에 개헌론자 간에는 분권형대통령제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대통령제가 과연 독재제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하나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고 국회의원 5분의 2만 반대하면 법안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대통령이 독재자인지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 9분의 4밖에 안 되는 야당 때문에 10년 넘게 북한인권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나뉘먹기식 위원장인 야당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마음대로 보류시키는 국회가 야당독재를 하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국회에서 의원내각제나 책임총리제를 하는 경우 국정이 마비되거나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국론분열 때문에 현재의 대통령조차 통일정책을 옹계 펴 수 없는데, 전쟁상태라든가 국가위기상태가 닥칠 경우 국가수호조차 옹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가안보와 통일·외교를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특별기고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회의원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등

정략이용 가능성

안보·통일·행복증진

佛·獨 헌법참조

국민발의도 검토를

한 국론통일이 필요하며 또 필요하면 여당만으로도 국가안보와 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국회마비로 국정이 파탄되는 경우에는 국회해산까지 할 수 있는 권위자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인이야 국회의원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 의원내각제가 좋겠지만 국민분할이 되어 있는 분단국가에서 잘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조급한 추진 안돼... 2018년 대통령취임 맞춰 발효를

헌법개정의 목적이 정치인, 국회의원의 권한강화여서는 안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통일실현, 국민행복의 증진에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4공화국의 정국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든 프랑스 제5공화국의 이원정부제를 검토해 봐야 하겠다. 독불전쟁에서 패전했던 드골 장군이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만든 헌법은 분단국가에서는 고려해 볼 만하다. 현 독일의 의원내각제가 잘 기능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위가 높고 국론통일기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며 건설적 불신임제와 연방제도 등의 분권형 정부형태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이 존경받는 국정의 중심이 되는 국가원수대망론이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헌법개정안 작성을 맡기면 국회의원의 권한강화, 특권유지를 위하여 헌법이 개악될 가능성이 있기에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2014년의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만든 헌법개정안을 참작하여 오해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14년의 헌법개정자문회의안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분권제 헌법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양분하였고 단원제 국회의 독재를 막기 위하여 상·하양원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법관·행정공무원의 월권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하여 감찰원을 독립기관으로 하고 국회, 법원, 정부의 회계검사를 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원을 독립시키고 있다. 사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분립시키고 있다. 중앙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하여서는 연방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완전분권제로 해야만 한 기관의 독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헌법안을 만들더라도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국민발의로 하는 것도 연구·검토하여야 하겠다. 헌법개정안의 성립은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정부형태만 임시응변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권 신장과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개정도 병행해야 하겠다. 2015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하고 2016년 총선 시에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능하면 2016년 하반기에 헌법개정을 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17년 상반기에 국민투표를 하고 2018년 2월 25일 새

대통령 취임 시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현행 헌법의 해석상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새 헌법개정은 제19대 대통령의 취임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헌법개정에는 국민의 요구가 왕성해야 하는데 아직은 국민적 요구가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 국회는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여 책임총리제나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우선 산적인 민생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하고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하여 여야토론과 타협으로 연정을 운영하여 성숙한 국회상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국회가 통과한 헌법개정안을 안심하고 국민투표에서 확정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4]

큰. 청계천 시공장에서 넘마입고 노는 아이들이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 또 다른면의 화려한 사진을 보면서는 신문을 얼굴에 덮고 울었다. 그렇게 가난했던 70년전 모습과 우리 한복이 할리우드에서 세계를 홀린 모습에 감격해서였다.

이게 꿈입니까. 제 나이 올해 70입니다.

권영국 (본회 기획위원회 간사)

‘불어터진 국수’ 끝된 총리 임명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한영애의 허스키한 목소리의 노래가 생각나는 요즘. 사표를 내고 10여

개월을 더 일한 국무총리, 두 명의 총리후보 낙마 후 우여곡절 끝에 이완구 총리임명, 기다리다 지친 국민들에게 ‘불어터진 국수’ 쫄이 된 새 총리 등장의 효과가 있을까. 박 정부 2년은 '나와 같이 누구 아침 볼 사람 거기 없소.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의 엔드리스 테이프.

정창기 (본보 편집위원)

정치적 로맨티스트 JP의 모습

혁명가는, 군인적 결단력과 시인적 감성을 갖추어야 한다는게 평소의 내 생각. 지난 2월의 끝자락

에 60여년 해로한 아내를 보내고 애통해하는 JP의 모습에서 확인된 건 인간으로서의 그의 본질적 성향. 그는 혁명가였지만 군인으로서의 기질보다는 감성의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로맨티스트, 아니면 센티멘털리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의 세계에서 평생 ‘인자’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

조규석 (본회 논설위원)

정치권 복지정책 재설계하라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 슬로건을 놓고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조차 ‘국민을 속이는 것’(김무성 대표), ‘허구’(유승민 원내대표)라며 복지논쟁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또는 복지 표(票)폴리즘 과정을 돌아볼 때 이번 새해 벽두 정치권의 행태는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로 분노를 자아낼 정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지급, 대학 반값 등록금 등 복지공약을 쏟아냈던 주체가 다른 아닌 정치권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 언론이나 연구기관 등은 정치권의 실현 가능성 없는 복지공약 남발에 우려를 나타내고 경고를 보냈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오로지 표만을 노리고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셈법으로 여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남발했다. 정도의 차이만 야당이 여당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고 여당 또한 야당에 뒤질세라 복지포퓰리즘에 편승했다는 뜻이다. 야당은 선거에 졌기 때문에 일단 국민 심판을 받은 셈이지만 당초의 공약 준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집권여당에서 자신들의 공약이 대국민 기만이었음을 스스로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방만한 국가경영, 재정건전성에 위기감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 남발의 심각성은 방만한 국가경영의 난맥상과 함께 재정건전성에 위기감을 던져 주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국가경영의 난맥상이란 공무원연금 문제, 투자측면의 4대강 사업, 무분별한 자원외교, 공적 투자기관들의 경영부실, 지방자치단체들의 호화청사건립과 불요불급한 사업투자에 따른 재정낭비,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의 각종 납품을 둘러싼 비리 등등을 말한다.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다음 정권이나 세대에 넘어갈 부담을 내다보고 국민혈세를 아껴 써야 하는데 자기 집권 중에 국민에 영합하는 일에 재정 등 공적자금을 퍼부어 벌여놓고 보자는 데에 문제가 있다. 누적 국가부채는 상당 부분 그같은 속성에 기인한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이행 평가를 현실점에서 단정적으로 내리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공약은 5년 대통령 임기 중 100% 이행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만하면 할만큼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는 차질을 빚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당초 내걸었던 공약을 잘 지켰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렇지 않고선 집권 여당 수뇌부가 앞장서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불을 붙일 리가 없다.

‘증세없는 복지’ 주장 수궁 어려워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말 속에는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복지공약을 축소조정해야 한다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담고 있다. 정치권이 우선 내년의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기선을 잡으려는 전략이라고 보여진다. 여권 수뇌부가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선언을 하려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라도 했어야 옳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도 그렇고 행정부도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만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이 수궁하지 않는다. 연말 정산 환급금 축소나 담배값 인상 등이 증세라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은 세수확보를 위한 포괄적 증세라고 본다. 보다 중요한 핵심은 석고대죄를 하든, 잘못을 인정하든, 이제라도 당·정·청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3년 잔여 임기동안 ‘합리적’ 복지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표만노린 포퓰리즘

與野 모두 책임

이제라도 잘못 인정을

대통령 남은 임기

합리적 공약이행

선별복지 적용을

문제는 복지가 확대되는 속도를 세월에 의한 재정 수입, 즉 세수 증가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데 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의 전체 복지예산은 2012년 92조원에서 올해는 115조원으로 3년 사이 23조원이 늘어났다. 박근혜정부 들어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복지 3종 세트의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한 탓이다. 올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10조원에 이른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10조 2000억원이 넘고 무상급식 예산은 2조 6000억원 가량이다. 모두 2~3년새 두 배 이상 켜중 났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예산이 2030년 50조원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복지 지출증가세는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복지재정을 부담할 세수는 오히려 크게 줄었다. 국세수입은 2014년 예상보다 10조9000억원이 덜 걷히는 등 2012년부터 3년간 22조원의 세수 결함이 생긴 상황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재정적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21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2009년 이래 12년 만에 적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2021년 적자 전환 뒤에는 2060년까지 한 번도 흑자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전망도 내놓았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가파른 증가세가 복지분야 지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산정책처는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2033년 국가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임기 내에 복지 공약 추진에 드는 비용을 세출 절감,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으로 조달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방안에 대해 많은 재정전문가가 의문을 나타낸 바 있었다. 막상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니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근본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증세가 필요한지, 적절한 증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증세가 어렵다면 복지수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등에 대해 전면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를 거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여건 반영한 복지정책 만들어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반대다. 북유럽이나 복지선진국의 예를 들어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식의 어떤 주장도 평가절하 한다. 방위비 부담과 인구구조문제, 사교육비 지출문제, 특히 재정건전성 문제 등 우리나라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복지정책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면적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선 사회안전망 구축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해 선별적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복지지출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성 극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린다고 해놓고 저소득층을 위해 값싼 담배를 제조판매하겠다는 발상은 정치권이 아직도 국민을 기만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또 다른 대국민 기만행위로 귀결되지 않고 최선의 국민복지 프레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계기로 승화시킬 기대한다. ☞

산클럽 3월 10일 시산제

동아일보

동아일보사우회 산클럽(회장 성낙오·본보 편집위원장은) 3월 10일(화요일) 북한산 기슭에서 올미년 무사 산행을 지원하는 시산제를 올린다.

새 회장에 전봉찬씨



KBS

KBS 사우회는 지난 2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추천위원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추천한 전봉찬씨를 14대 회장으로 인준했다.

사우회 소식

전봉찬 신임 회장은 KBS 경영본부장, 비즈니스 감사직을 역임했다.

감사에는 윤대작·홍수완씨, 부회장에 김상근, 김효경, 이종문(분회 회우), 조원석(분회 회우), 최덕용씨가 선출됐다. 이번 회장·감사 선거에서 대한언론인회 김은구 회장은 회장·감사 추천위원장을 맡았다.

사우회 사무실 이전

조선일보

조선일보사우회가 사무실을 옮겼다. 지난 2

월 11일 이제까지 2년동안 자리했던 무교동 남강타워 5층에서 조선일보 광화문빌딩 8층으로 복귀한 것이다. 전화 02) 724-6672, 6673

‘한경사우회보’ 속간

한국경제

한국경제사우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3월 1일자로 사우회보 10호를 발행했다. 2006년 9호 발행 후 9년 만에 속간된 이번 호는 우선 타블로이드 컬러판 4면으로 3개월마다 발행할 예정이다.



최귀조 회장의 취임사와 2015년도 사업계획 등을 머릿기사로 한 한경사우회보는 2면에 김호기 본회 회우의 ‘나의 재직시절’

2015 정기총회 이모저모, 3면 ‘한경광장’에 실린 시인 이학주 회우의 시 ‘배꼽 빠진 세상이야기’ 등이 돋보인다. 한경사우회는 또한 회보 속간에 이어 ‘모범한경인상’도 제정한다.

차대통령 마지막 골든타임 활용을

미국의 경우 20세기 이래 오늘의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20명의 전·현직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인물들은 누구일까. 미국의 대다수 정치학자들, 대통령학 학자들은 26대 테오도어 루즈벨트,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33대 해리 트루먼, 35대 존 케네디, 40대의 로널드 레이건 등 5명을 꼽는다.

이들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 각계와의 원활한 소통과 공정한 인사를 통한 우수한 인재발탁, 그리고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관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회견등으로 소통이론 레이건

레이건의 경우를 보자. 1980년 11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계 언론계와 지식인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영화배우 출신인 그가 과연 막중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며 내심으로 걱정했다. 당시 미국은 수년래 극심한 경기침체에다 이란주재 미국대사관원 53명이 과격파인 호메이니에 의해 1년넘게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레이건은 취임후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갔다. 인질문제를 조용히 해결했고 석달후 전국 공항의 관제사 75~80%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하자 72시간 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자는 가차없이 해임하며 난관을 돌파했다.

레이건은 다음으로 경제 회생을 위해 재정지출 억제와 세금 감면법안을 의회에 제출한후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상하원 의원들에 대한 설득공세에 나섰다. 그는 두달반 동안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10여차례 조찬대화를 가졌으며 8차례의 대국민 TV회견과 담화, 그리고 전국을 돌며 각 이익단체에서 20여차례의 연설을 통해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에 나섰다. 그런 노력끝에 의회를 통과케 한 경제법안이 미국 경제를 기사회생 시킨 이른바 '레이거노믹스(Reganomics)'. 레이건이 소통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불신으로 굳게 닫혔던 국민과 야당, 언론의 마음을 열게 했던 것이다.

학자들은 레이건 집권 8년동안 단 한번도 고위직 기용에 있어 인사 말성과 실패가 없었던 점에 감탄한다. 그는 당선직후 과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때부터 핵심측근인 에드윈 미즈를 인사팀장으로 임명한후 그로 하여금 각부 장관, 백악관 핵심참모 및 중요 기관장의 후보들을 脫政派, 脫지역원칙에 의해 오직 능력과 경륜, 適所 위주로 고르게 임명한 것이다.

레이건은 요직에 임명한 후에는 소관 업무를 전담케하고 거의 간섭을 하지않았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따금 'K장관'을 'T장관', 'E특보'를 'P특보'라고 잘못 불렀지만 각료들 모두가 '철저한 위임 원칙'을 잘알고 있어 이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틈만 나면 부인 낸시여사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농장으로 가서 말을 타고 소를 몰며 지냈지만 24시간 전화를 열어 놓고 어느 장관이나 참모든지 보고하고 대화하게 했다.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들을 위로하고 정부의 입장을 밝히곤 했다.

그야말로 소통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친구이자 동지로 만든 것이다. 레이건은 임기말에 '이란 콘트라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그는 모든 권력자가 겪게 마련인 레임덕(lame duck)을 오히려 즐기면서(?) 인기를 누렸다.

우리나라는 1987년 10월 여야 합의개헌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행된지 올해로 28년째가 된다. 5년단임 기간동안 대통령이 국정을 가장 소신있게 펼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의 활동경험과 결과로 보아 대체로 취임후 2년 또는 2년반~3년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황금기(Golden Time)가 지나면 대체로 통치권의 動力과 카리스마가 약화되거나 국민의 피로감과 점증하는 불만,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영이 서지 않아 무엇하나 제대로 할 수 없어 레임덕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부진—野 제동걸기로 힘겨운 나날

2월 25일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무슨 일을 했는가. 당초에 공공 교육 노동 금융등 4대 개혁으로 국가를 쇄신해서 창조경제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만성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 하겠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실재는 개혁의 부진함과 표류속에 여전한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와 교착된 남북관계, 들끓는 사회적 갈등, 그리고 대선공약과 관련한 방대한 복지비용 확보문제로 씨름을 해야했다. 여기에서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한 세월호 참사의 여파, 그리고 자신들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야권의 제동걸기 등으로 힘겨운 고투를 벌여야했다.

고위직 후보자들에 대한 잇단 부실 검증-인사실패와 소위 청와대 비선 라인의 지리한 문건 파동은 금싸라기 같은 골든타임을 허송하고 국민의 불신만을 증폭



이성춘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이사·논설위원
-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

임기 3년차 돌입

美 레이건 본받아

시행착오 극복

소통—공정인사 함께

명확한 정책으로

국민설득 해 가야

시켰다고 할 수 있다. 결과는 후보때부터 50%선을 유지했던 박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이하로 곤두박질 쳤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 '잘 못하고 있다'가 65.4%로 최악의 상황을 드러내기에 이른 것이다.

기자회견 자주 열어 국민에 설명을

정권의 골든 타임에 이처럼 어이없는 결과를 낸 원인은 무엇일까. 역시 3가지 면에서의 시행착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자가 청와대에서 각계인사와 담소하고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재래시장을 찾아 민정을 살피는 게 소통의 전부가 아니다. 소통의 범위는 무엇보다 대 국민, 대 여권, 대 야권으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은 빈번한 기자회견과 담화, 각종 연설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의중과 시정계획을 국민이 소상하게 알게하는 게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지름길이다.

지난 2013년 1월 12일 취임후 두번째 가진 기자회견(年頭)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소통에 국민들이 낯설어 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둘째는 잇단 고위직 인사 실패다. 5년 임기중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전 대통령들은 2~6명의 실패를 기록했던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임기 2년 동안 총리와 장관 등 7명의 후보자 낙마를 기록했다. 나홀로 인사, 수첩 인사, 밀실 인사 및 엉성한 검증의 결과이다.

후보의 발탁과 검증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는 4무원칙, 즉 탕평이 없고, 능력과 경륜의 검증이 부정확하고, 발탁의 명확한 해명이 없고, 인사실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어서 국민을 의아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나라 어느정부나 인사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어야한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통한 국정쇄신의 인상, 그리고 국민에게 신선감을 안겨줄때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 여기에는 인물의 내용과 무게, 그리고 인사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질질끄는 인사, 마냥 안개속의 인사는 약효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정권의 불신만 가중시킬 따름이다. 도대체 국가적 재난사고가 난후 사의를 표명한 총리를 주저 앉히고 인사실패 문건파동 등으로 근 8개월 가까이 논란이 된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를 마냥 미룬 이유가 무엇인가.

셋째는 정책의 모호성과 대 국민혼란 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회생과 실업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내세운 '창조경제'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하면 과연 몇명이나 될까.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해도 성공하려면 국민이 단번에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어야한다. 더구나 작년말 이래 정부의 연발 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지방세 인상소동 등은 정책혼란의 극치다. 이거 왜들 이러는가.

이제 5년 임기가운데 3년차, 마지막 골든 타임에 돌입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성공하는 방법은 오직 한 길 뿐이다. 앞에서 적시한대로 지난 2년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박대통령은 팔을 걷어붙이고 대 국민소통, 대 정치권 소통에 나서야한다. 수시로 기자회견과 연설로 국민과 대화를 해야한다. 아울러 정권의 공동 책임자인 여당 지도부와 정례적 만남으로 소통의 물꼬를 터야한다. 여당이 힘을 얻어야 대야설득에 나설게 아닌가. 인사문제는 地緣, 學緣, 政緣을 떠나 능력과 경륜, 도덕성위주로 공정인사를 기한다면 실패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당장 공약대로 政피아와 낙하산이 없는 인사를 관찰시켜야 한다. 명확하고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정책은 성패의 바로미터다. 재원없는 복지, 증세없는 복지는 공염불임을 국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국민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어려울때 일수록 난국은 상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결 해야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갈길은 먼데 해야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적고 더구나 골든 타임은 빠듯하다. 박근혜대통령은 레이건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2015 건강포럼 14일 개강

‘回春하는 임플란트 요법’

겨우내 쉬었던 ‘건강포럼’이 신춘을 맞이하여 개강, 여러분의 건강생활을 돕겠습니다. 이달의 주제와 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회춘하는 임플란트 요법’

연사: 이윤수 박사(전문의)

날짜: 2015년 3월14일(토) 오후2시부터

연락: 이보길 건강포럼 간사(010-4461-5657)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산으로 가나

정부 부처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제까지 언론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다. 문체부가 하는 일들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크게 기사로 다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담당 업무 중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것이 별로 없고, 주로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정부 중 ‘문화 융성’ 비중 가장 높아

하지만 요즘 문체부는 외부의 시선이 집중되는 부처로 바뀌었다. 장관 차관 임명 등 인사 문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안 되는 집안에 골치 아픈 일만 일어난다고 문체부 업무와 관련해 이런저런 잡음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4대 국정기조에는 ‘문화 융성’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 모든 정권이 문화 분야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국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박근혜 정부처럼 문화를 앞세운 정부는 없었다. 1970년대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듯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예산 가운데 문체부가 차지하는 예산을 임기 중에 2%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첫해인 2013년에는 1.19%였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는 ‘문화 재정 2%’ 공약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도 구성했다.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조직이다. ‘문화 융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문체부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9월 문체부의 체육 담당 국장과 과장이 갑자기 경질됐다. 이 일은 당시만 해도 별 관심을 모으지 못했으나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유진룡 장관을 바꾸면서 ‘면직’ 처리를 하자 문체부 내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 장관이 오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교체될 유 장관을 왜 ‘면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그만두게 했는지 여러 관측이 나돌았다.

같은 시기에 조현재 문체부 차관은 “한국체육대 총장 공모에 지원한다”며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문체부는 장관 1명과 차관 2명 가운데 2명이 자리를 비우는 ‘지휘부 공백’ 상태가 빚어졌다. 조 차관은 한체대의 총장추천위원회가 1순위 총장 후보로 올랐으나 교육부의 승인 과정에서 탈락해 또 한번 궁금증을 자아냈다.

지난해 10월에는 문체부 1급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해 3명이 문체부를 떠났다. 연말에는 유진룡 전 장관이 김종 문체부 차관과의 갈등설을 시인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교수 출신의 김종 차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과 대학 동문이다. 유 전 장관은 또 2013년 체육 담당 국장 과장을 교체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특별기고



홍찬식

·동아일보 수석 논설위원

문체부 장·차관등

人事에 이상기류

각종의혹 터져나와

정상활동 의문시

민간에 위임등

실행방안 재검토 필요

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폭로했다. 장관 출신이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 차관은 유진룡 전 장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물러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현재 차관 후임이자 문체부 공무원 출신인 김희범 차관이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일까지 일어났다. 다른 조직도 아닌 정부 부처에서 벌어진 일이다. 청와대는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들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체부와 관련된 각종 불미스러운 의혹도 잇따라 터져 나왔다. 홍익대 출신인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산하 기관 인사에서 홍익대와 관련된 인사들을 중용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중북 콘서트’로 비판을 받았던 재미교포 신은미 씨의 책이 문체부 선정 우수도서로 뽑혔던 사실도 밝혀졌다. 일부 음악인들은 국립오페라단의 신임 단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부적격 인물이라며 반발, 결국 물러나게 만들었다. 국립오페라단 단장은 문체부가 임명한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 융성’을 강조하며 예산 배정 등에서 문체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정작 실무 부처는 정상적인 활동이 의문시 될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문체부 내부 문제는 문체부가 청와대의 체육비리 척결 지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다. 2013년 5월 태권도 선수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편파 판정에 항의해 자살한 사건이 벌어지자 박 대통령이 단호한 대책을 주문했으나 문체부의 대응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한다. 이로 인해 후속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지배 문체부 甲질 고쳐야

또한 문체부 정책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그동안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甲의 역할을 해오면서 부작용과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문체부가 지금까지 뒤숭숭한 상태에서는 문화 정책이 잘 돌아갈 수 없고 ‘문화 융성’도 이뤄지기 어렵다.

‘문화 융성’이라는 목표 자체는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내다 보는 시기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희망하고 있다. 이념과 세대, 계층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이 갖는 사회 갈등의 완화 효과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문화 융성’ 목표의 실행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를 정상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문화 융성’을 추진하는 업무를 꼭 문체부에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미국은 정부가 문화예술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 차원에 맡기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 통제와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 융성’ 목표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K]

이완구 총리후보 청문회를 보면서 ‘성직자 뽑는 심사장’을 또 연상했다. 청담스님, 김수환 추기경, 한경직 목사가 대상이면 둘은 틀림없이 떨어질게다.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고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탄식했는데의인 없는 속세에서 의인 찾느라 고생하는 의원님들의 헛수고? 大義를 말하는 의원도 있던데 “당신은 의인인가?”

헛갈린다. 정치인은 정말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가? 의아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나라와 정당 그리고 정파와 나를 세워놓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다. 여론조사라도 해 보면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하지만 결과는 뻔할 거다. 꼽기는 100% 나라를 1번으로 꼽을 테니 말

이다. 정치가 크고 정치인이 위대하다는 현실을 거둬 실감하게 하는 청문회다. 그리고 그런 청문회는 바뀌어야 한다고 절감한다.

물론 국회도 국회의원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 갈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세월호 사고로 국회가 150일 동안 놀았을 때 풍자시 한편 썼었다.

〈힘겨루기와 막말, 억지와 거침이

청문회와 언론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셀수록 이기는 그레섬의 정치가 정말 밋다. 국회를 이끄는 박영선 원내 대표는 영선실에 가보고, 이완구 원내 대표는 완구점에 배우라)

그 이완구 원내대표가 정말 완구점에 갔던 모양인가?

총리후보자가 되면서 자판기란 별칭을 얻더니 온갖 장난감들이 설치되는 것 같은 청문회

쇼를 치른 그를 턱걸이 총리라고 폄하하는 언론도 있었다.

국회가 총리자격을 인준한 날 밤, 누운 채로 종편 텔레비전의 대담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벌떡 일어났다. 출연자가 “정책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점검하는 청문회...”라고 하자 사회 보는 기자가 “정책청문회 하면 재미없잖아요”라고 받아친다.

어! 문제는 바로 저거다.

저런 재미를 추구하는 언론이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기자의 한마디가 언론의 현재를 웅변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슬프다.

재미있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언론이 여론을 주도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에 밝은 미래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재미가 미래를 가꾸고 키워주지는 못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사회의 목탁이라 했거늘, 언론이 바로서야 청문회도 바로 되고 나라도 바로 간다.”는 말로 맺는다. [K]

사드(THAAD) 한국배치 주저하지 말라

〈고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국은 70년간 조여 왔던 일본의 고삐를 풀어주고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한국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도록 비호하고 있다. 미일의 대중 압박을 1차적으로 막는 방패막이로 한반도를 이용하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다. 한국의 안보환경을 이루는 동북아 군사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부족한 전력보완 강대한 동맹국 있어야

미국과 일본이 한편이 되어 중국과 대결하는 이러한 새로운 동북아 정세는 한국에게는 큰 부담을 가져다준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어렵게 이루어 놓은 경제적 기반과 민주정치체제를 하루아침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전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지켜 나가려면 최소한의 자위 능력과 억제전력을 갖추어야 하고 모자라는 전력을 보완할 강대한 동맹국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자위 능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억제전력이라 함은 한국을 공격하는 나라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보복 능력을 말한다.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북한의 핵전력과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약 1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투발 수단으로 사거리 300km인 SCUD-B, 500km인 SCUD-C, 1,300km인 노동, 2,500km인 대포동-1, 3,000km인 무수단, 그리고 사정거리 10,000km인 대포동-2 등을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이미 생산배치해 놓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북한의 공격 징후가 보이면 미리 발사 시설과 폭탄, 운반체를 파괴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선제적 타격(preemptive strike)을 위해서는 24시간 정찰로 타격 목표의 위치와 북한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발사 준비를 마친 무기들을 미리 파괴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공격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선제 타격을 위해 북한의 무기들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할 수 있는 장비 확보에 착수했고 파괴 수단으로는 地對地미사일, 空對地미사일, 艦對地미사일과 전폭기에 장착한 합동유도탄(JDAM) 등으로 구성되는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핵전력 보유계획을 포기하게 되리라 예상한다.

KAMD체제구축 시간 걸리고 예산확보도 어려워

둘째는 더 소극적 방법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신뢰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 되면 역시 그러한 무기개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군은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고도 15km 이내까지 들어온 적 미사일을 요격할 패트리엇-Ⅲ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KAMD 구축이 순탄치 않다. 방어체제를 구성하는 탐지 장비와 요격 장비를 모두 갖추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방위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에 보태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국민총생산의 242%인 35조원만을 국방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이런 긴축예산으로는 10년 걸려도 필요한 방어 능력을 갖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상 대책으로 동맹국인 미국의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요격미사일체계 도입이다. 사드는 사거리 200km 내에서 고도 150km 이하로 들어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지대공미사일 운영체계이다. 패트리엇-Ⅲ은 요격 가능 고도가 40km 밖에 되지 않아 적 미사일이 목표에 근접해 왔을 때만 요격할 수 있어 요격에 실패하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비해 사드는 적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요격할 수 있어 서울을 지키기에는 아주 좋다. 북한은 패트리엇을 피하기 위해 ‘SCUD’나 ‘노동’을 고고도로 쏘아올린 후 급하강하게 하여 서울 등 한국 내 목표를 타격하려 하고 있어 우리는 사드가 꼭 필요하다. 미군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중국은 미군의 한국내 사드배치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주한 중국대사가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사드배치를 거부하라고 한국 정부를



이상우

·본회 회우
·전 조선일보기자
·전 한림대 총장
·현 신아시아 연구소장

북한군 움직임

24시간 파악해야

선제적 타격가능

대미 억제전력 상실

중국주장은 억지

안보이익 지켜가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하여 배치해 놓은 자국내 대륙간탄도탄이 한국에서 요격당하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억제전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억지다. 중국이 미국 동부를 겨냥해 배치해놓은 대륙간탄도탄의 비행 궤적은 모두 시베리아-북극해-캐나다를 잇는 선이어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로는 요격불능이다. 중국 남부에서 괌, 하와이, 미국 서해안을 겨냥하여 발사하는 미사일은 한국 부근을 지나게 되나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고도가 1,000km를 넘어 사드로는 요격불능이다. 한국배치 사드는 북한이 한국으로 쏘는 미사일과 그릴리아 없겠지만 중국이 한국을 겨냥하여 쏘는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을 뿐이다.

중국 사드의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중국이 비호하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우위를 잃지 않도록 하자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중국에 당당히 우리입장 밝혀야

한국은 중국이 반대한다고 사드 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사드 도입은 절대로 필요하다. 주저하지 말고 중국에 당당히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미국 등 한국의 우방국의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

국가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국가 안보와 복지 정책이 부딪히면 안보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과의 화해 협력체제 구축도 중요한 정책이겠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외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안보 이익을 희생하면서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할 말은 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혼란스러운 외교 정책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한 지원 수준을 재조정하려 하고 있다.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된 듯한 인상을 주는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과 감정적인 반일 자세 표명, 그리고 무력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북한과 광복 70년을 함께 경축하자고 제안하는 정부의 시의에 맞지 않는 대북 접근 정책 등은 미국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만하다. 미국은 그래서 한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 정부의 한 정책담당 관리는 회의석상에서 심지어 “한국이 무엇을 믿고 미국과 중국을 저울질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미국이 한국과 거리를 두는 듯하니까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려 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떨어져 나온 한국을 중국은 더 이상 대등한 국가로 다루지 않고 종속 국가로 보려 한다. 닳줄 끊어진 배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렇듯 우리의 정책 노선이 흔들리면 그 파장은 관련국 모두에 미친다.

다른 정책들과 달리 외교-안보-통일 정책은 한 번 잘못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는다.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차분하게 안보 정책을 다시 다듬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전문가들에게 물어주기를 바란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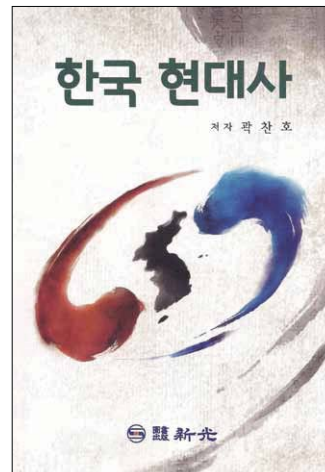
회우들이 펴낸 신간

곽찬호 회우 ‘한국 현대사’

곽찬호 회우가 최근 ‘한국현대사’ 책을 발간했다. 저자가 해방 후 6·25 한국전쟁까지 교육자로, 정치계 초년병으로, 6·25참전용사로 현장을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신문에 연재(50회)한 것을 (1) 조국해방으로부터 6·25 한국전쟁 (2) 6·25 한국전쟁 발발부터 휴전협정까지 두 파트로 나누어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와 자라나는 후세들이 참 역사의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책 발간 취지를 서문에 적고 있다.

〈도서출판 신광·국판 228쪽·값 15,000원〉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인사이드

‘이완구 녹취록’ 보도윤리 먹칠

국무총리, 제 1 야당 대표, 여당 원내 대표 등 요직 인선을 둘러싼 흠탕물 저질 정쟁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막말이 어젠다가 되었던 2월 신문은 한국언론의 고질적 병폐인 정파저널리즘(Partisan Journalism) 극복 조짐은 보였으나 신문윤리실천요강 준칙을 위반하는 도덕적 결함을 드러냈다.

비밀녹음 야당에 제공 윤리강령 위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 선언에 이어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상식 이하의 제안에 이념을 초월해 보수·진보 언론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무성대표의 박근혜대통령 비판에 대해서도 신문들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집권당의 분열과 리더십 흔들기를 걱정했다. 문재인 당대표의 이승만·박정희대통령묘소 참배를 히틀러 묘소와 야스쿠니 참배에 비유해 비난한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의 막말에

모든 신문이 웅단폭격에 나섰다. 2월 정치인 막말과 망언은 실체가 분명해서 ‘진실 보다 진영 논리가 우선’하는 정파저널리즘이 발붙일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돌출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의 언론 관련 발언’과 외교부가 제공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발표 자료의 취재·보도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신문의 비판은 적절했으나 문제의 이 후보자 언론 관련 자료의 비밀녹음과 취재 자료를 야당에 넘긴 정파저널리즘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재·보도준칙을 위반한 중대한 사태로 후속조치를 지식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일보 2월 10일자 1면에 이완구 후보자 녹취록 파문 사태를 사과하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도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성하는 의견을 실었지만 신문의 신뢰 추락과 언론인 직업윤리 해이 문제가 이번에도 ‘찾잔 속 태풍’ 같은 일과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일보는 총리후보자의 언론 관련 발언 녹취록 기사화를 검토했지만 “비공식석상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었기 때문에 보도를 보류했다”고 해명하고 “그러나 기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것과 야당에 취재 파일을 넘긴 것은 신문윤리실천 요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 준칙 및 윤리’는 “포스트 기자로서 획득한 정보를 다른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조직원 모두의 의무”라고 규정했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편집할 의무를 약화 시키거나 약화 시킬 수 있는 어떠한 파당적 일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기자가 특정 정치권에 종속되는 정파



박석홍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 전 언론법학회 감사

신문시평

신문 신뢰 - 언론인 직업윤리 추락 정치인의 막말비판 政派주의 극복

저널리즘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이완구 후보 녹음파일 사태가 처음이 아니다. 2002년 16대 대선 과정에서도 당선 유력 후보자가 정치부 기자들에게 대통령 임명 되면 특정 신문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한 발언을 “기사 가치가 있다”고 신문제작회의에서는 논의했으나 취재기자가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 쓰겠다”고 버텼다. 기사화 안된 사례가 있었다. 문제의 발언을 한 후보자는 대통령 재임 중 ‘언론과의 전쟁’을 벌여 선거전 발언을 실천했다. 2002년 대통령 후보자의 언론 관련 발언은 선거 쟁점이 될 수 있었지만, 기자가 선호하는 정치인의 대통령 당선을 최우선시하는 정파저널리즘의 부작용으로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건국 과정의 한민당·남로당과 연관된 정파저널리즘의 옛 껍질을 한국신문 일각에서는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신문의 정파저널리즘은 6·25전 쟁중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추진하던 이승만정부를 비방하는 야당 발언을 선호해 협상 상대였던 미국편에 서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미국도 건국초 제퍼슨주의와 해밀턴주의의 양대 진영 정쟁에 언론도 참여해 정파주의 보도의 모순이 반 백년간 지속됐다. 이완구 총리가 인용한,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한다”는 말을 했던 제퍼슨은 두번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신문에 드러난 사실은 믿을 수 없다. 오염된 매체에 들어간 진리는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정파주의 신문을 비난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저술한 토크빌도 1831년 미국신문의 대통령 공격 보도에 대해 “파괴적이며 분노할 만한 이유도 없이 황포를 부린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런 언론의 전통이 미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건국초기 당파적이

었던 미국 신문은 선정적인 황색신문의 대중지 단계를 지나 진실을 보도하는 정론지로 발전했다. 해방70년 한국언론도 정파주의 저널리즘을 벗어날 시점이 되었다.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만이 유독 후진적인 것은 정파주의 언론이 보수·골통의 저질 정치를 방관하며 공존하는 것이 주요인이라고 분석하는 정치학자도 있다.

2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혼란의 1차 책임은 박정권의 인사 실책·권력집중·소통 빈곤에 있지만, 정권 쟁취를 위해 대선 직후부터 다음 대선 전략으로 극한 투쟁에 돌입하는 구대정치의 악습과 이것을 용인하는 정파주의 언론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언론계의 자성론도 있다. 신문은 국가가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국가의 정체성 제시와 함께 파워엘리트의 속성과 권력유지 메커니즘을 해부하고, 개혁의 메스를 드는 용기도 신문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문화통합과 역사의식 고양 기능도 신문의 책무다.

한·일 국교 기념 행사 비판 미흡

정치인들의 막말 망언에 이어 외교부도 2월 13일 이상한 발표를 했다. 외교부는 니카이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의 방한에 맞춰 “금년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으로 지정,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으로 기념한다”는 외교부 발표는 일제 침략으로 1876년에 부산·인천을 개방한지 100년이 되었던 1976년을 ‘개항 100주년’으로 자축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학계는 비판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체결 협상에서 한국은 1910년 경술국치(한일합방조약)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1910년 한일합방이 대한민국 건국까지 유효했다”며 침략 사죄와 침략 배상을 거절했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 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1910년 한국침략 사죄를 거부했다. 한일기본조약은 일본을 중심축으로 하는 우방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에 맞춘 불완전하고 굴욕적인 조약이었으며, 일본의 침략 사죄가 빠졌기 때문에 한·일 관계 정상화도 미완성이었다. 일본은 1965년 조약을 근거로 일본군 성노예(위안부)문제 등 침략과 범죄 사죄를 외면하고 있다. 침략 사죄와 침략 배상을 기피한 ‘한일기본조약’을 ‘기념한다’는 외교부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 아이젠하워는 이승만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했으나 이대통령은 “일본이 한국 침략을 사죄하지 않기 때

일그러진 언

‘이완구 녹

이완구 총리는 후보기간에 험난한 통과리례를 치렀다. 차남의 병역문제와 재산 문제로 청문회에서 진땀을 흘려야 했다. 그뿐인가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관련된 의혹보도를 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총리후보로서의 자질문제까지 의심케한 단계로까지 발전했었다.

다음은 우리 언론계의 취재를 둘러싼 보도윤리문제다. 이완구 후보가 사석에서 한 말을 기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야당 국회의원에 게 빼돌렸고 자신의 소속 신문이 아닌 KBS에서 먼저 보도했다는 상식이하의 일이 벌어져 물의를 빚은 소동이다.

취재윤리 무너지는 언론현장

일선기자가 어떻게 그런 반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를 넘겨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기자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일은 偽計의 방법으로 기사를 만드는 행위다. 남이 사석에서 한 말을 몰래 녹취해서 보도하는 일이야 말로 일종의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물의를 일으킨 기자는 대체 기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몰랐다는 말인가.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만 보아도 기자들이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터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있다. ‘회원’(기자협회)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 방법을 쓰지 않는다. 회원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또 회원은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한다 등등이 그것이다. 이번 녹취록 사건은 취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모델케이스라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언론의 상궤를 일탈한 이번 사건’에 대해 소속사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이런 경우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언론

문에 한일관계 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사죄 않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2010년 5월 10일 일본 지식인 100명도 ‘한일병합’ 100주년에 즈음한 지식인 성명을 통해 “병합조약 등은 원래 불의·부당한 것이었다”고 선언했고, 미국 의회와 역사학계도 일본이 한국 침략과 위



지용

·본회 논설고문
·전 경향신문
·6·25참전 언론

‘취재기술자’

‘人間’이 먼저

보도과정

인권침해등

철저히 차단

저널리즘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론인 自畫像

취록' 파문



공우

논설실장
론인회 부회장보다
되어야

할때

자유를 구가하는 모든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통하는 상식이다. 이웃 일본만 해도 지난 2004년에 아사히신문 기자가가 몰래 녹음한 취재원과 대화내용을 제 3자에게 누설한 사실이 드러나자 즉각 기사를 퇴사 처분한 일이 있었다.

미국 굴지의 방송사인 CBS에서도 지난 2005년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군복무에 관한 오보를 낸 기자와 확인 안하고 보도한 임직원 등 4명을 해임했다.

이는 기자의 사명감보다 오로지 '특종'에만 눈이 먼 데서 빚어진 오보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특종' 집착관행 수술할 때

언론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관용어가 있다. “기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앞으로 기사를 뽑을 때 시험성적 등 지적 능력에만 치우치지 말고 도덕성과 인격성 까지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선발방식으로 방향을 바꿀 때다.

'특종'만을 의식해서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찌되든 특종만 하면 그만

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취재관행은 철저히 추방해야 한다.

언론사는 정확한 기사를 쓰는 기자가 필요한 것이지 특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취재기술자'가 통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언론이 '무관의 제왕'으로 불리던 시대도 끝났다. 이제는 신문 방송기자는 '무관의 봉사자'일 뿐이다.

언론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익과 함께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 필요 충분조건이다. 기자가 개개인의 부정 비리를 있는 그대로 폭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도과정에서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절대로 금해야 한다는 말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보호는 언론자유 못지않게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4]

안부 문제를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관계 보도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외교부 발표문 받아쓰기를 뛰어 넘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돈독히 하며 박정희·김대중 정부의 대일외교정책을 보완하도록 신문이 박근혜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케이블 TV의 보도채널이 늘고 종합편성채널이 대폭 허가되면서 시청자들은 보도의 홍수 시대에 살게 되었다. 아니,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 살게 되었다.

많은 가정이 케이블로 지상파를 포함한 각종 TV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고 있는 요즘, 시사토크의 범람이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 놀라게 된다. 풍요한 말의 성찬 속에 빠지게 된 것이다.

같은 소재 같은 내용 다뤄

종편과 보도채널들이 다루는 시사토크의 소재는 국내의 사건 사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시사토크에서 다루는 소재들이 많은 부분 중복된다. 이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사건이 터지면 다른 사건이 바통을 이어받을 때까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다루어진다.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보아도 똑같은 소재의 사건 사고들이 별다른 내용의 차이 없이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말 그대로 '종합편성'이어야 한다. 보도도 보고, 교양과 예능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편들에서는 보도, 그 가운데에서도 시사 토크를 다루는 토크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돼 있다.

보도는 흥미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공정성과 정확성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양이나 예능 프로그램들보다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제대로 된 기자 한 명 양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지 언론에서 뼈가 굵은 전문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기자직은 입사후 견습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반년 정도의 견습 기간, 선배 기자들을 따라다니며 취재와 기사 작성 요령을 배운다. 타사 기자들과의 인간관계, 출입처에서의 처신 등을 배우게 되는 것도 이때이다.

방송기자들은 언어 트레이닝도 거친다. 지방 출신 견습기자들이 가장 고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혹독한 견습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한 사람의 기자로서 대접받는다. 경영의 입장에서 기자를 채용하면 반년간 고도의 무상 교육을 보수를 지급하며 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보도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직종이다.

또한 정규 뉴스를 비롯한 보도 프로그램은 제작비도 많이 든다. 해외 각국에 특파원망을 구성해야 하고, 기동성 있는 출장 취재와 고가의 장비 동원이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갖는다. 이 모두가 돈이다. 따라서 보도는 돈을 쓰기만 하고 벌지는 못하는 직종이라는 인식이 있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뉴스전문 케이블 TV 채널인 YTN이 개국 이후 오랜 기간 경영에 얼마나 허덕였는지가

國格손상 시사토크 프로그램

방 송 시 평



유자호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파리특파원
-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전문성없는 진행자들 수준 한심
출연자 자기과시-막말 위험수위

그 반증이다.

또한 보도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들도 자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송사에 걸리게 될 위험성도 크다. 보도기관이나 기자가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오보가 문제가 되어 언론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언론사가 시위대의 공격으로 불탄 적이 있으며, 최근 프랑스에서의 '샤를리 엡도' 참사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보도는 이렇게 양날의 칼을 갖고 있다. 결코 아무나 함부로 달려들 직종은 아니다.

보도의 가장 높은 가치는 우리나라 헌법과 미국의 수정 헌법 등 각국이 최고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있다.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보도는 우대되어 왔다.

종편TV 제작비 부담 줄여

종합편성채널들은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했던 취재망 구축을 母社인 신문의 취재망을 활용함으로써 해결한 것이다. 제작비 문제는 시사토크 프로그램들을 대폭 제작함으로써 풀어나갔다. 이는 종편의 경영을 위한 자구책의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사토크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사토크프로그램에서는 방송 출신이나 신문 출신의 언론인 또는 대학교수 등을 진행자로 기용한다. 과거 지상파에서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오랜 경륜을 쌓은 자사 출신의 보도 전문가들이 맡아 왔다. 그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보도 채널의 시사토크 진행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그것은 경쟁하듯

이 흥분하고, 여과되지 않은 막말까지도 내뱉는 것을 보며 해보는 생각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말이 도마에 올랐을 때, 어느 종편의 시사토크 진행자는 그 말을 야당에 전한 언론인을 '그게 어디 기잡니까? 쓰레기지.'라고 내뱉었다. 또한 그 기자의 소속사를 거명하며 '그 신문사는 다른 언론사에 사과해야 해요'라는 것이었다. 나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 그리고 뛰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방송 보도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하는 자괴감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종편의 시사토크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마치 누가 더 잘 흥분하고 화를 잘 내는지를 경쟁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

문에 여과되지 않은 표현들도 예사로 한다. 인기를 의식하는 것 같다. 어느 채널의 시사토크 프로그램 진행자가 바뀌더니 다른 채널로 옮겨 앉아 경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보았다.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진행은 이제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본다.

진행자가 이러니 출연자들도 자기 과시와 폭로, 막말과 중복 출연을 예사로 한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진행자보다 폭이 더 넓어서 변호사와 수사관 출신, 프리랜서, 탈북자 등으로 다양하다. 어느 때는 한 수사관 출신이 오전에 종편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의 청문회를 다루는 토크 프로그램에 나가 질타하더니, 오후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는 토크 프로그램에서 다른 문제를 질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는 제작자의 안이함 때문이다. 어느 채널에서 잘한다는 채널이 있으면 곧바로 불려다 쓴다. 지금처럼 시사토크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상황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패널을 발굴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매일 매일 프로그램들을 메워가는 것도 벅찰 것이기 때문이다. 그 틈에 몇몇 패널들은 이 채널 저 채널로 쉴 새 없이 쫓아다니며 더욱 더 자극적인 표현, 감정적인 표현, 주관적인 표현들을 내뱉고 있다.

종편과 뉴스 전문 채널들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은 총체적 난국에 왔다. 자정능력을 잃으면 외부에 의해 수술될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고 본다.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편성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종편들은 보도와 교양, 예능 프로그램들을 균형 있게 편성하기 바란다. 또한 시사 문제를 다루는 토크 프로그램들을 축소하기 바란다.

방송은 나라의 얼굴이다. 국민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지금의 시사토크 프로그램들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4]

3·1운동은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

“기미 3월1일, 대한의 독립을 선언한 날. 그 날의 오후 2시, 옥탑(玉塔)공원에서 처음 대한독립 만세성이 발한 때. 이날 부활의 날, 이때 부활의 때, 반만년 역사가, 대한의 국명이 세계의 기억 중에 대한민족의 존재가 오래 통곡의 눈물 속에 잠겼던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족의 자유가, 이 모든 우리의 귀한 것이,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 이날에 부활하였도다...”

위의 글은 3·1절 1주년을 기념한 상해 ‘독립신문’ 논설 서두 일부이다. 이 글은 3·1운동 96주년을 맞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3·1정신이 집약되어 있다. 그 날 대한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때 일제의 무력 탄압으로 빼앗긴 반만년의 역사와 대한의 국명과 세계의 기억 중에서 사라진 대한민족의 존재와 태극기와 대한민족의 자유 등 생명처럼 귀중한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였다고 천명하였다.

북한선 지도층을 ‘부르조아 상층분자’로 매도

3·1운동은 실로 신분 직업 지역 종교 학문 사상 성별 빈부 등을 역사상 처음으로 초월한 성스러운 독립운동이었다. 애초부터 거족적 평화 시위를 통하여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고 일제의 반성을 끌어내어 자주 독립을 이룩하려는 것이었으나 일제는 경찰과 헌병과 육해군 병력까지 동원하여 촌철조차 갖지 않은 선량한 시위 군중에게 마구잡이로 발포 살상하고 체포된 시위자들에게는 온갖 악랄한 고문을 가하였다.

3월 말 이후 만세 시위가 지방 농촌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일제의 탄압이 더욱 극심해졌고 만세시위로 폭력시위화되었다. 일제의 포악한 무력 진압 중에도 전국에서 1,500여 회의 시위에 200만이 넘는 민중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한 통계에 의하면 피살자 7천여명에 부상자가 1만 5천여명이었고, 피수자수 4만 6천여명 중 1만여명이 기소되었고, 그 중 186명이 부녀자였다. 또한 일제 관헌에게 불태워지고 찢긴 민가가 715개소, 교회당이 47곳, 학교가 2개소였으니 마치 1차세계대전의 연장전과 같았다.

3·1운동은 그 투쟁방법에서나 당시의 세계 정세로 볼 때 독립을 당장 성취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북에서는 3·1운동을 ‘3·1인민봉기의 실패’로 규정하고, 그 이유는 당의 영도를 받지 못하여 그들 투쟁이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3인 민족대표와 3·1운동 지도층을 ‘부르조아민족운동상층분자들’로 규정하고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는 피압박민족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려 한 것인데 여기에 헛된 기대를 걸고 ‘독립청원운동’을 벌인 것 등은 “미국에 대한 사대사상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기 때문이며 철두철미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배신 행동이며 일제 강점자들에 대한 비굴한 투항 행위”라고 하였다. 그런데 근자 우리 주변에서도 북의 이러한 오류된 역사관에 동조하는 일부 부류가 존재함에 대하여 경계와 올바른 비판이 요구된다.

자주독립 쟁취능력 내외에 과시

절대 독립을 지향한 3·1만세운동은 실로 빛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첫째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지무단통치와 한민족 말살정책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한민족의 절대 독립의지를 온세계에 알린 점이다. 둘째 한민족 내부의 민족 독립운동 역량을 획기적으로 대폭 강화하고 그 후의 독립운동의 확고한 원동력을 형성하고 자주독립쟁취 능력을 강화 보장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민족주의의 총집결체로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국 상해에 수립하여 3·1운동의 지향점이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넷째 3·1운동의 영향과 성과로 만주 연해주 등 국외에서 독립군 단체들이 대대적으로 편성되어 청산리전투, 봉오동전투 등 항일무장투쟁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다섯째 식민통치 변환으로 인하여 민족문화보존운동과 민족실력양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여섯째 3·1운동 이후 새로운 농민운동 노동운동 형평운동

특별기고



박용옥

·(사)3·1 여성동지회 명예회장
·전 성신여자대학교수
·전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이사장

신분 · 종교 · 사상초월

성스러운 독립운동

중국의 항일운동

인도의 抗英에도 영향

북한의 평가절하

동조세력 경계해야

어린이운동 등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전통적 차별과 억압을 받던 부녀들의 평등의식이 높아져 사회적 활동이 확대되었다. 김마리아에 의해 조직화된 대한민국의 독립투쟁은 국내외의 부녀들을 조직화하여 부녀들도 평등한 국민 의무 수행자로서 독립전쟁 참여를 준비하여 활동 한달 여만에 2천여명의 조직원을 갖는 거대한 항일여성독립운동 단체로 발전하였던 점 등은 주목되는 바다.

일곱째 3·1운동의 민족적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차대전 종전 후 한국 독립을 보장 받았던 점이다.

기독교 순교자의 용기보다 더 높은 항거정신

마지막으로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이다. 첫째 3·1운동을 통하여 세계인들의 한국인관을 변환시켰다. 항일독립운동을 목도한 선교사들은 한국인의 항거정신이 서양인이 가장 존송하는 기독교 순교자의 용기보다 더 높다고 평하였다.

둘째 3·1운동은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제국주의 지배자에 대한 첫 번째 항거였다. 당시 ‘대륙보(大陸報)’ 등 중국신문들은 3·1운동을 상세히 보도했다.

중국 신문화운동의 기수이며 베이징대학문과대학장인 진독수(陳獨秀)는 ‘매주평론’의 편집인으로 ‘매주평론’에 수회에 걸쳐 3·1운동을 소개 해설했고, ‘조선독립운동의 감상’이란 논문에서는 “3·1운동을 세계혁명사상 신기원을 열었다... 우리는 조선민족이 독립 자치의 영광을 멀지 않아 성취하고 발현할 것을 굳게 믿는다”고 격찬하며 중국민족의 쫓겨난 호소하였던 점으로 볼 때 5·4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셋째 인도의 抗英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항영운동으로 수차례 투옥생활을 한 자와하랄 네루는 16세인 외딸 인디라에게 매일 옥중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 “코리아의 3·1운동에서 대학을 갓나온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적극적 투쟁을 하였음을 알면 네 마음이 끌릴 것으로 안다”고 씬으로써 딸의 항영정신을 고무시켰다. 3·1운동은 이 밖에 제국주의 열강 아래 신음하는 여러 약소민족들의 독립의지를 고무시키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3·1운동정신을 통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번성하고 그 힘을 세계 곳곳으로 확산시키는 원동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필자]

乙未年 시산제에 초대합니다

대한언론인회산악회는 乙未年 새해를 맞아 올 한해의 무사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 행사를 갖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산제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산제장소 : 북한산 향로봉 기슭
- 집합장소 : 불광역(지하철 3호선·6호선 2번 출구 구내)
- 집합일시 : 2015년 3월 27일(금요일) 오전 10시
- 산행코스 : 산제 후 북한산 둘레길 7구간 산행
- 문의전화 : 이상호 회 장(010-3855-8624)
나용경 총 무(010-2691-0084)
황귀근 산행대장(010-2266-3169)

▶ 시산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우는 오찬 장소인 통나무집(02-356-5533·불광1동)으로 오후 1시 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통나무집은 불광역 2번 출구로 나와 구기터널 방향으로 10분 거리, 북한산 생태공원 옆 골목에 있음. 용화사 입구)

대한언론인회산악회

年회비 납부 바랍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서재의 서탁(書卓)위에 새로산 책들이 쌓여있다. 작년 연말에 주문해두었던, 건강에 관한 외서들이다.

첫째는 『닥터 아트킨스 다이어트혁명(DR. ATKINS' DIET REVOLUTION)』이다. 로버트 C.아트킨스박사가 쓴 이 책은 전세계에서 1,000만부가 팔린 슈퍼 베스트셀러다. 문고판이라 활자가 작고 낮은 단어가 많은 영어서적이라 읽는데 시간이 걸리겠다.

두 번째는 ‘영양학계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리며 ‘차이나 스터디(THE CHINA STUDY)’를 지휘한 미국코넬대학의 닥터. 콜린 캠퐸(TColin Campbell, PhD)박사가 집필한 차이나프로젝트로도 불리는 보고서다. ‘차이나 스터디’는 미국의 코넬대학,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중국예방의학연구소가 합동으로 1983년부터 20년 넘게 중국에서 펼쳐진 사상최대의 역학(疫學)조사를 바탕으로 책의 부제가 말하듯 ‘동물성 단백질 신화(神話)의 붕괴’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데 상·중·하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보고서라 이 또한 시간이 걸리겠다. 일본 번역판이라서 어려울진 없어도 대중 읽지 않는다면 일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세 번째는 영국의 여류지질학자 ‘제인 플란트(JANE PLANT)’가 쓴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손안에(YOUR LIFE IN YOUR HANDS)'다. 끈질긴 탐구력으로 여러번 재발한 유방암으로부터 생환한 학구적인 투병기이다.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원인은 우유에 있다고 단정하는 ‘제인 플란트’의 투병과 추적기는 전세계에서 40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다. 일본 번역판이라 거의 다 읽었다. 내용이 충격적이라서 놀랐다. ‘제인 플란트’교수는 지질학자이면서도 의학계에 이바지한 공로로 ‘영국왕실의학협회’의 종신회원이 된 바 있다. 나의 ‘치병기’ 다음에 쓸까 한다.

네 번째는 당뇨병에 걸렸다가 탈출한 일본 의사 ‘에베 고리(江部 康二)’가 쓴 『주식(主食)을 빼면 당뇨병은 좋아(개선)진다』다. 당뇨병치료에 새로운 지표가 되는 ‘당질제한식(糖質制限食)’을 표지에 내걸고 있다. 주식(밥 탄수화물)과 빵, 그리고 국수같은 당질을 줄임으로써 당뇨병을 개선하는 노하우를 상·하 500페이지에 상세히 밝히고 있다. 당질제한식이 당뇨를 개선한다는 ‘에베’의사의 주장은 미국의 당노학회가 공인한 바 있는 당뇨병 치유방법이기도 하다. 총 2,000페이지가 넘는, 전기(前記)한 책들을 속독하고 난 뒤에 그 요점을 회보에 실을 것이다.

내가 당뇨병을 고친 이야기는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집에서 가까운 종로구 인사동의 내과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큰 약봉지를 곁에 두고 거실의자에 앉아있었다. 며칠동안 나의 혈당을 측정한 그 병원의 황씨 성 가진 원장이 당뇨병선고를 내리고 2개월치분 약을 처방한 것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17>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나의 治病記 — 통풍·당뇨·고혈압·심장병 ①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없었다. 언제나 돌과구를 생각했을뿐 마음 상하지 않았다. 호운(好運)을 타고났는지 고비를 넘기고 나면 보다 나은 일이 생기곤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풍이라는 고약한 질병으로 10년 넘게 복약(服藥)하고 있던 처지에 병발증이 무서운 당뇨병 선고를 받은 나는 그때 76세의 노인이었다. 앓고 있던 통풍도 만만찮은 병이다. 로마제국 쇠망의 원인이 통풍에 있다는 설(說)이 있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통풍은 간(肝)기능에 문제가 있고, 당뇨병은 췌장기능에 문제가 있는 인

다.

지금 검당일지라 써 붙인 대학노트 2권을 펼쳐보면 그렇게 세세하게 식습관을 비롯한 운동량까지를 기록하고 추적한 스스로의 지구력에 놀라게 된다.

노트의 첫장에 신체조건(신장, 체중 등)과 그에 근거한 섭취칼로리를 붉은 큰 글씨로 적어 놓

고 있다. 통풍 이후로 식습관을 많이 바꾸었으므로 동아일보시절을 통틀어 72kg을 유지했던 체중이 66kg으로 줄어들었고 168cm던 키가 늙어서 줄어들었는지 165cm였다. 표준체중은 58.5kg, 적절한 섭취 열량은 1,500칼로리다. 그런데 당시 나의 섭취칼로리

체질을 바꾸려면 식습관과 운동이다

접병이라 일컫는다. 유전과 식습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거실에 앉아있던 나는 약봉지를 들고 일어섰다. 버리기 위해서다.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넣고는 대학노트 한권에 검당일지(檢糖日誌)라는 라벨을 써서 붙였다.

이 글의 제목을 치병기라 한 것은 내가 내 병을 다스리기는 했어도 그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법으로 쓰기에는 내가 의학을 전공하거나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나의 투병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된 것이다. 투(鬪)자가 붙었지만 싸우지 않더라도 나의 자제력과 의지력 앞에 당뇨병은 못견디고 물러 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아주 낙관적인 성격을 타고 난데다가 긍정적이며 지속력이 강한 사람이다.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확인한바다.

그때 나는 생각하기를 문제는 인슐린이 아닌가. 당을 처리하는 인슐린분비가 부족했든, 비만으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졌든(인슐린 저항성)간에 문제는 인슐린 아닌가. 그렇다면 당을 조절하기 위해 식습관을 바꾸고, 당을 근육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운동(걷기)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당뇨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단순한 논리지만 일리있다. 그때도 나는 끊임 없이 책을 읽었으므로 상당한 양의 건강정보를 머릿속에 보유하고 있었

는 2,000칼로리 정도로 생각되었으므로 500칼로리 오버다.

나는 통풍 이후로 음식을 보면 칼로리 양을 순식간에 알아차리는 영양사(營養士)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당뇨병에 대한 칼로리 측정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검당일지에는 하루에도 혈당측정을 대여섯번 한 것으로 되어있다. 무엇을 얼마만큼 먹고 1시간뒤 혈당치가 얼마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혈당이 얼마인지, 식후 1시간뒤 1만보 정도를 걸었을때는 혈당이 얼마인지, 집요하게 혈당치를 쫓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야 당뇨병이 못견디겠지.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 매일 걷기로한 2만보는 대충 14km의 거리다. 아무나 하기 어려운 고행(苦行)을 나는 가까이 한것이다. 저녁 식사후 만보계를 보면 대개 14,000보 정도로 기록되어있다. 곧장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가까운 삼청공원으로 간 나는 더러 땀배지가 출몰한다는 인적드문 숲길을 마냥 걷는다. 한바퀴 800m, 여덟바퀴 돌면 64km정도 된다. 집에 돌아와서 혈당을 재보면 30이상 내려가 있다. 이런걸 당뇨병 치료법이라고 한다면 누가 하겠나? 그래서 치병(治病)이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치병이나 치료나 뭐 다를게 있나. 뒷날 나의 이야기를 들은 어떤 의사는 탄성을 질렀다. 아무나 하기 어려워져서 그렇지 놀랍다는 것이다. 우줄할 것도 없다. 그렇게 하

지 않고서야 고약한 병이 물러가겠나.

2007년 12월 29일 저녁 식단을 보자. 잡곡빵 반쪽, 잣, 호두 조금, 당근 반개, 사과1/4, 아가리크스즙1컵, 현미·울무밥 반공기, 김3장, 참치찌개 반공기다. 아가리크스는 남미 볼리비아산의 항암성분이 뛰어난 약용버섯이다. 국내에서 재배에 성공했으므로 한 2년 정도를 달여서 1컵씩 마셨다. 당근은 얼마뒤 먹기를 중지했는데 건강에 좋은 야채이긴 하지만 당근과 감자는 혈당을 수직으로 올리므로 당뇨병환자에겐 금기식품이다. 이걸 내 판단이다. 혈당측정을 하루에 대여섯번 했으므로 섭식(攝食)과 운동량이 미치는 혈당의 추이는 지금도 휘하다.

검당일지는 앞으로 책을 쓸때 요긴한 자료가 되지 않나 싶다.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뽁뽁하게 적어놓은 노트에는 붉은 글씨의 경구(警句)가 수없이 적혀있다. 예컨대 『잣과 호두는 열량이 높음. 잡곡빵1쪽에 잣, 호두를 조금 먹었는데도 혈당치 높음. 조금 먹고 운동(걷기)을 많이 했을때 효과 있음.』 또는 『식사 칼로리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식후 3km이상 걷기』, 더러는 붉은 큰 글씨로 『철칙위반(鐵則違反)』이라고 적고있다. 그때는 미국 당뇨학회가 공인한다는 당질제한(糖質制限)은 모르고 있을때다. 그러나 검당일지를 자세히 보면 칼로리 제한의 한 방법으로 당질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기를 6개월, 탄수화물(主食)은 적게, 야채는 많이, 죽이나 사나 하루2만보 걷기를 철칙으로 삼은지 180일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금도 그때의 생활습관과 비슷하다. 아침은 완전한 생채식(生菜食)인데 탄수화물은 작은 고구마 한 개다. 토마토, 브로콜리, 사과, 귤, 연뿌리(1/4)한사발에 드레싱은 두유에 탄 매실식초 한순갈이다.

매일 10,000보씩 걷는다. 어김없다. 84세에 복용하는 약이 한가지도 없다. 발은 튼튼하고 허리도 꼳꼳하고 무탈하다. 걷는데 이골이 나서 헬스가 쉬는(한달에 한 번)날은 3·1별당 밑의 청계천을 따라 왕십리 한양대학까지 왕복이 한나절에 거뜬하다. 20km가 넘는다. 농담이지만 이러다 죽지 않으면 큰일 아닌가 싶는데 사신(死神)이 웃겠다.

당뇨병과 함께 통풍도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한데 당뇨병 치병 6개월 뒤 체중이 55kg로 줄어 거울 속에 비쩍 마른 어떤 노인이 서있었다. 그래서 묻는이가 많았다. “왜 그렇지, 암이요?” 귀찮아서 체중을 61kg으로 도로 불러 지금은 딱 좋다. ‘일병식재(一病息災)’가 아니라 ‘무병식재’라 더 바랄것이 없다. 체질을 바꾸는데는 식습관과 운동이다.

그런데 병은 다 지나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뒤에 난데없이 심장판막증이란단. 수술을 해야된다는 의사말을 못들은 척,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나는 괜찮다. 다음회(18회)에 또 한 번의 치병기를 쓰겠다. ☞

언론가 소식

인촌 김성수선생 60주년 추모식

전 동아일보 사장 인촌 김성수선생 60주기 추모식이 지난 2월 16일 11시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용훈) 주관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유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 본회 제재형 고문, 김준하 원로회우, 김태선 동우회장, 김광희 자문역 등 2백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고 박권상 원로회우 1주기 추모식



동아일보 논설주장과 KBS 사장을 지낸 언론인 박권상(전 본회 회우) 1주기 추모식이 지난 2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진흥순 전 KBS 이사의 사회로 150여명의 언론인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약력 보고, 추모문집 헌정, 추모사, 박권상기념회 창립보고, 유족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박권상기념회(이사장 김진배·본회 회우)는 창립보고를 하고 앞으로 박권상 이름을 딴 언론상과 학술상을 제정하고 자유언론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권상기념사업회는 또한 이날을 기해 ‘박권상 언론학’ ‘박권상을 생각한다’ 등 두권의 책을 출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임 회장에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



한국 신문방송편집인 협회는 지난 2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제20대 회장에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사진)을 선출했다. 황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대한민국 언론의 보루라는 자부심을 갖고 저널리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공동대표 승명호 회장·이종승 사장 선임



한국일보는 지난 2월 2일 승명호 회장(동화그룹 회장 겸임·사진 左)과 이종승 사장(사진 右)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승 회장은 지난 1984년 동화기업에 입사한 뒤 1993년 동화기업 대표와 2001년 대성목재공업 대표를 거쳐 현재 동화그룹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 사장은 지난 1988년 서울경제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과 대표, 한국일보 대표를 지냈고,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시스 회장을 역임했다.

부산일보 사장에 안병길씨



부산일보는 지난 2월 13일 제67회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안병길(53) 이사(사진)를 사장으로 뽑았다. 신임 안 사장은 1987년 부산일보에 입사한 뒤 정치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광고국장 등을 역임했다.

백관수선생 학술심포지엄 열려



서울언론인클럽(회장 강승훈)은 지난 2월 2일 동아일보사의 후원으로 ‘창립 30주년 기념 백관수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사진) ‘근촌 백관수의 생애와 업적 조명’(발표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본회 정진석 명예회우와 남시욱 여영무 박 실 회우가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자로 참여했다.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③

폐렴백신 두종류 다 맞는게 좋다



이광영

학술지 미국 내 과학회지(Annals of Internal Medicine)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폐혈증, 뇌막염 그리고 폐렴과 같은 폐렴구균(pneumococcus) 감염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두 종류의 백신을 모두 접종받는 것이 좋다’

는 2015년 미국 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ACIP)의 권고안을 최근호에 게재했다.

ACIP는 미국 연방정부의 질병관리 및 예방본부의 예방접종에 대한 권고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성인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김(David Kim) 박사는 “고령자들에게서 폐렴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은 이미 보편화 되었지만 폐렴백신은 다당백신(Pneumo 23, Prodiac 23)과 단백결합백신(Prevnar 13)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며 다당백신은 폐렴세균 23종, 단백결합백신은 폐렴세균 13종에 대해 감염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 백신으로 모든 폐렴균 감염을 예방해 주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백신이 다른 방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백신을 다 맞아야 모든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 전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만 성인이 폐렴구균에 감염되는 수가 자그마치 100만 명에

이르는데 이중 7%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국립감염성 질환 재단(NFID·National Foundation of Infectious Diseases)의 보고다. 고령자가 폐렴구균에 감염되면 젊은이에 비해 심각성이 10배 더 높다. 65세 이상의

경우 폐렴구균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18,000명에 달한다. 폐렴구균에 감염되면 심장기능저하, 청력 손실, 간질발작, 시력상실 마비 등 합병증으로 일생 고통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두 백신은 한 번에 함께 접종받아서 안 된다. 그 이유는 두 백신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면역체를 만들기 때문이다. 미연방정부 예방접종실시 자문위원회는 고령자의 경우 단백결합백신은 접종한 후 최소한 8주 후에 다당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다당백신을 이미 접종한 사람은 1년이 경과한 후에 단백결합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폐렴구균 질환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서 특히 문제가 되므로 이들 위험군의 경우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소에서 맞은 폐렴백신은 다당백신이다. 따라서 단백결합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

KTV 사장에 류현순 전 KBS부사장



KTV 국민방송의 신임사장에 류현순 전 KBS 부사장(사진)이 취임했다. 류 사장은 중앙여고, 고려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KBS 대외정책팀장, 제주방송총국장, 정책기획본부장을 거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KBS 방송부문 부사장을 지냈다. 1992년 이달의 기자상, 1999년 최은희 여기자상을 받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데이터저널리즘’ 발행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최근 ‘데이터저널리즘-스토리텔링의 과학’을 발행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저널리즘스쿨의 디지털 저널리즘을 위한 토우센터가 2014년 발간한 ‘The Art and Science of Data Driven Journalism’을 김익현 건국대교수가 번역한 이 책은 최근 언론계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 데이터 저널리즘을 깊이 있게 다룬 보고서이다. 부록에 있는 데이터저널리즘 전문가 인터뷰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훌륭한 읽을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희망 를 만들어요

회우동정

가나다순

광화문 문화포럼 편집장



김동철(전 스포츠조선 부국장)회우= 최근 중견 언론인모임인 광화문문화포럼(회장 이종덕) 편집장을 맡았다.



이광영(한글신문)회우= 최근 종로구 이화장 1길 32에 사무실을 개설했다.

6·25 해외참전용사 후손 무료건강검진



김인규(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상담역= 우리나라에 유학중인 6·25 전쟁 해외참전용사 후손 5명을 선정, 2월 11일 순천향대병원에서 무료건강검진을 받게했다. 한국전쟁기념재단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연합군 후손들의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을 하고있다.

방통위 방송대상 심사위원



김현선(전 문화방송 부국장)회우=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금년도(2015) '방송대상 심사위원'으로 위촉. 김회우는 작년도 국립순천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다.

에너지경제 전문위원



나용경(전 한국일보 교열부장)본회 행사집행위원장= 지난 2월 1일자로 에너지경제(일간) 전문위원으로 재취임.

언론인 저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남시욱(전 문화일보 사장·본회 상담역·사진위)·이규섭(전 국민일보 논설위원·사진 아래)회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2015년도 언론인 저술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남 회우는 '6·25 전쟁과 미국-트루먼 애치슨 맥아더의 역할', 이 회우는 생태기행 '자연아, 놀자!'를 연내에 출간한다.

'무엇이 정의로운 복지인가' 토론회



박범진(사회민주주의 포럼 공동대표)회우= 2월 2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회민주주의 포럼 주최로 '무엇이 정의로운 복지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현정회 회장 출마



신경식(전 국회의원) 본회 자문위원= 대한일보 기자와 13-16대국회의원을 지낸 신경식회우가 현정회 회장에 출마했다. 신회우는 현정회 홍보편찬위원장, 대변인을 거쳐 현재 부회장을 맡고있다. 현정회장 선거는 3월 24일에 있다.

사무실 이전

이도형(현상과 진상발행인·본회 상담

'100세 시대 삶의 지혜' 방송



이광영(한국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회우= (1)관악 FM(100.3MHz)고령자를 위한 1시간짜리 '꽤지나 청춘' 프로그램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에 세차례(1월 30일 '100세 시대는 선택 아닌 인류 진화발전과정', 2월 6일 '아름다운 마무리·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 2월 13일 '만일 내가 치매에 걸리면-') 출연. (2)2월 6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참행복나눔운동 총회에서 감사에 선임.

로컬푸드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종연(전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농협정보시스템 감사위원장)회우= 1월 31일 농협정보감사위원장 퇴임과 동시에 사단법인 로컬푸드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로컬푸드운동은 본격적인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순수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식품의 연구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상명대 석좌교수



이흥우(전 동아일보 나대로 시사만화가)본보 편집위원= 이달부터 상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돼 '시사만화연구' 등의 강의를 한다. 시사만화가가 석좌교수로 임용된 것은 이흥우 편집위원이 처음이다. 1967년부터 시사만화를 시작한 이 편집위원은 동아일보에서 1980년 11월 12일부터 2007년 12월 26일까지 27년간 '나대로 선생' 8,568회를 연재했다.

장만영선생탄생 100주년 기념문집발간



장석훈(전 조선일보 편집국차장)회우= 최근 선친인 장만영 시인(1914-1976)의 문집 4권을 발간했다.

92세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



조성국(전 코리아헤럴드 편집위원)원로회우= 당년 92세 고령으로 지난 2월 23일 용인 자동차검사소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했다. 조 원로회우는 이날 적성 검사를 통과한 후 "내 마지막 운전면허증"이라며 크게 웃었다.

이연상 회우 별세



이연상 회우가 지병으로 지난 2월 7일 별세했다.

향년 72세. 경기 성남시 장례식장 2층 3호실에서 2월 9일 오전 10시 발인했다.

고인은 1966년 신아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 한국경제일보 정경부 기사를 거쳐 1976년 한국신문연구소 간사를 역임했으

며 1983년 도미해서는 85년까지 미주지역 교포사회에서 10여년 간 재미언론인으로 활약했다.

언론계를 떠나서는 오창컨트리클럽 고문직을 맡기도 했다. 대한언론인회에서는 김은구 회장과 정운중 상임이사가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인터넷신문 발행·지역조직 구축논의

본회 기획조정위원회

2015년 첫 기획조정위원회의가 본회 사무실에서 25일 11시에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 국가 발전을 위한 '올해의 정치인, 기업인' (또는 최악의 정치인, 기업인)을 회원들이 선정해 현장하는 사업과 본회의 인터넷 신문 발행 문제, 그리고 본회의 지역 조직 설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 개의 안건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모여져 조속한 추진을 집행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회의 위상과 권위를 제고하기 위한 '올해의 정치인, 기업인' 사업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자

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 지회 조직을 만드는 문제도 조직 확대와 회원 확장이라는 원칙에 찬성,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에서 본회 지회의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의 성향 분석과 숫자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중론이어서 본회회보를 통한 조사업무를 펼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밖에 올바른 언론 풍토 조성을 위해 FACT FINDING 사업 등 연구 조사사업도 벌이자는 정일화 위원의 제의와 원로 언론인들의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올바른 역사이야기' 출판과 영상 제작 사업을 벌이자는 조규석 위원의 제의가 있어 함께 논의했다.

입회비·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5년 1월 30일 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연회비〉 김영일(15) 고수균(14) 구만완(15) 국기일(15) 김익수(15) 김철진(14) 노진호(15)

문명호(15) 박범진(15) 박승채(15) 박용근(15) 손주환(15) 송충섭(15) 심의표(15) 신귀남(15) 신동호(15·34년생) 신성순(15) 오건환(15) 윤기로(15) 이근양(14) 임한순(14) 조천용(15) 최광일(15) 최상목(15) 한영도(15) 홍순일(15)

임원협찬금
정형수 이사
300,000원

회우가족동정

홍순일 원로회우 장남 통일부장관 내정



청와대 1급 비서관에서 차관을 건너뛰고 장관으로 전격 발탁된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51·사진)는 홍순일 원로회우의 장남이다. 홍 내정자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역설할 때나 같은 해 3월 독일 국민방문에서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할 때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우경조사

부 음

김명수(경향사우회회장) 모친상= 2월 25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본회 인사



이은주(사진) 명 사무원(2015년 2월 1일 자) 권다혜 해임(2014년 12월 31일 자)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광복 70년
미래 30년

대한민국 100년의 드라마

KBS가 함께합니다

잘 일어설 수 있게 잘 이겨낼 수 있게

공영 미디어랩 코바코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코바코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